

#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

정준표 | 영남대학교

### | 논문요약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ES 모델)은 한국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 글에서는 정치의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이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투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델과 이런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거관심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델 등을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정치의 공급 수준이 낮은 18대 총선에서는 SES 모델의 적실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2) 정치의 공급 수준이 높은 17대 총선에서는 SES 모델의 적실성이 높다.
- (3)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선거관심도를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 (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결과는 정당 및 후보자가 상호 간에 차별성 있는 이념 및 정책노선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 서론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 1948년 초대선거(95.5%) 이후 제6대(72.1%)까지 투표율이 하락하였고, 제6대부터 제9대(73.0%)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12대(81.6%)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제13대(75.8%) 이후 제16대(57.2%)까지는 하락하다가 제17대(60.6%)에 반짝 상승한 후, 지난 4월 9일의 제18대에서는 지방선거의 최저투표율(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의 48.9%)보다 낮은 46.1%라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기초해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김형준 2008). 이런 의미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선출된 대표의 민주적 정통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 자체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sup>1)</sup> 투표자와 기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투표율은 또한 대표의 불균형문제를 심화시킨다. 투표율이 90% 수준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우나, 미국과 같이 투표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의 차이는 상당한 정도로 나타난다(Lijphart 1997; Franklin 1999).

불균등한 참여는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인 일표 원칙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시민의 필요와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상에 어긋난다(Verba 1996). 대표와 정치적 영향력에서의 불평등이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부, 그리고 교육 수준에 있어 더 특권적 지위에 있는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이는 실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Lijphart 1997).<sup>2)</sup> 참여

---

1) 투표를 비롯한 정치참여의 바람직함에 대한 많은 규범적 논의(이에 대해서는 박찬욱 2005 참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적 증거는 미약하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부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민주 체제의 정통성 및 안정성을 투표율과 연결시키는 논의가 경험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낮은 것이 지나치게 낮은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선 규명해야 할 것이다(Bennett and Resnick 1990).

에 관한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ocio-economic status model: SES 모델)’에 의하면 교육, 직업, 수입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크다(이남영 1993; 김욱 1998; 어수영·곽진영 2001; 박찬욱 2005). 이러한 내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국가에서 그 경험적 타당성을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Milbrath and Goel 1977, 92; Nagel 1987, 59).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 중 투표에 한정할 경우, 비록 17대 총선의 경우를 포함하여 SES 모델의 예측과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이 모델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연구가 더 많다.<sup>3)</sup> 그렇다면 SES 모

- 2) 레이파트(Arend Lijphart)는 1996년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회장 연설에서 불균등한 참여를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라고 지적하면서 강제적 투표가 참여와 평등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까지 주장한다(Lijphart 1997). 미국 선거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파악한 계급의 투표여부 및 정당선택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계급투표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진하(2004)의 연구도 불균등한 참여가 미국정치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 3) 투표참여 여부에 관한 연구는 투표방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김욱 1998). 여론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민주화 이전의 선거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투표참여와 불참여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수영·곽진영(2001)은 1987년의 13대 대선, 1988년의 13대 총선,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가 감소했다고 한다. 14대 총선 직전에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다변인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서 박찬욱(1992)은 관심 및 인지도, 정치효능감과 신뢰, 동원 및 권유 등의 변수를 통제할 때, 사회적 배경 변수 중 연령 및 도시화 수준을 제외한 어떤 변수도 투표참여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4대 총선자료를 관별분석한 이남영(1993)은 교육, 소득, 직업이라는 독립변수 중 직업만이 유의미한 판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SES 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농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사무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15대 총선의 경우에도 박찬욱(1996)은 교육수준과 투표와의 양변수 관계는 SES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음을 보인다. 연령, 거주지 규모, 교육수준, 성별을 포함하는 다변인분석을 통해 김욱(2002)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교육변수가 투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는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투표에 부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유의확률: 0.213) 교육수준이 투표에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고 한다. 최장집(2005, 25)은 2001년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조사결과 등을 들면서 오랜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투표동원으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고연령층, 여성, 저학력층, 농촌지역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한국

델은 최소한 투표참여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층계급'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에서 배제되어간다는 주장(최장집 2005, 26)은 잘못된 것인가?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들 변수가 투표참여에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면 왜 그러한가? 민주화 이후 투표율의 하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투표율의 하락 현상은 교육, 소득, 직업 등의 변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글은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거연구가 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정치적 재화의 공급이라는 공급측면의 변화를 무시하고 이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sup>4)</sup>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다른 사람 혹은 집단보다 더 투표할 확

---

의 전형적인 투표패턴이 민주화 이후 학력, 지역, 성별 투표율 편차는 줄어들고, 젊은 신규 유권자 투표불참 비율은 급증하였고, 소득 및 계급위치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과거와는 정반대의 패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17대 총선에서의 투표 여부를 포함한 분석에서 박찬욱(2005)은 투표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SES 모델이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하나, 투표의 경우에는 교육과 가구소득 수준으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17대 총선을 다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조성대(2006)는 소득수준과 투표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발견했고, 같은 자료를 사용한 다변인 프로빗 분석에서 이준환(2006)은 교육이나 생활수준이 투표참여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나, 정작 그의 <표 1>은 비록 1%는 아니지만 5% 유의수준에서 생활수준이 투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14대에서 17대까지의 대통령선거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김진하(2008)는 16대 대선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SES 모델의 예측과는 어긋나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이나 소득이 투표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김형준(2008)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저학력의 기권율이 고학력보다 낮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위 김진하, 김형준의 결과와는 달리, 서복경(2008)은 다변인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여성일수록, 연령, 학력,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4) 헤이(Colin Hay)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보편적 현상이라 할 정치적 참여의 쇠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민적 의무감의 약화, 정치적 냉소주의의 증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선거권 연령의 인화로 인한 원자화된 유권자의 증가 등 유권자 측면에서의 변화인 수요측면의 요소에 치우친 접근을 비판하고, 시장화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탈정치화, 정당 간의 정책수렴 현상 등 정치의 공급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Hay 2007). 필자는 헤이의 논의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이 지적 자체는 백 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률이 높으며 왜 그러한가 등을 규명하는 정태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비교분석에서는 공급측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변화가 어떤 사람 혹은 집단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선거연구에서는 던지기 어려운 다양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시도하는 비교연구는 투표와 기권에 관한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투표참여와 기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이 글에서 직·간접적으로 검증할 가설을 도출하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자료를 제시한다. 제3절은 경험적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로는,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이 정치적 공급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는, 양변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연령집단 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양변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가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다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선거관심도 및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절 결론은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 이 글의 분석결과의 함의를 제시한다.

## II.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 글의 주 관심은 누가, 즉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투표하는가에 있다. 하지만 누가 투표하는가의 문제는 왜 투표하는가라는 문제와 이론적 차원에서는 분리될 수 없다(김욱 2002). 앞서 언급한 SES 모델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SES 모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중 투표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확인된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자. 이변인분석(bivariate analysis)을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SES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변수(들)를 통제된 연후에 교육과 투표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가? 한국과 같이 연령(실제로는 연령집단)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교육수준은 급격히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연령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 투표와의 관계는 SES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기 쉽다. 16대 총선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하 89.1%, 중졸 82.1%, 고졸 74.1%, 대재 이상 66.9%의 투표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지만(유의확률: 0.000) SES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연령을 통제할 경우 각 연령집단에서 교육은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사실 주 3)에서 언급된 SES 모델의 예측과 정반대되는 결과는 주로 이변인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SES 모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SES 모델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SES 모델이 다른 변수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켜 통제해야 하는가? 이는 우선 SES 모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는 이유(즉 왜 투표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더해,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분석모델 속에 포함하여 제외된 변수에서 오는 편의(偏倚, bias)를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King, Keohne, and Verba 1994, 169).

김욱(1998; 1999; 2002)은 SES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외부의 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동원투표(mobilization)'의 존재로 설명하면서, 동원투표라는 제외된 변수에서 오는 편의를 나름대로 제거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김욱(1998)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일수록 자발적으로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동원투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제외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15대 대선의 경우 교육, 소득, 직업 모두 SES 모델이 예측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sup>

5) 이 결과는 한국선거연구회 16대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것이다.

6) 이 방법에 의한 검증 및 '동원투표'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주11 및 이와 관련된 본문의 논의를 참고하라.

SES 모델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하 필자는 왜 투표하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시킴으로써 경험적 검증을 위한 분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투표와 기권의 동학: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왜 투표하느냐란 질문은 별 무리 없이 왜 기권하느냐란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sup>7)</sup> 기권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보아 (1)투표할 수 없었다(불능), (2)투표하기를 원치 않았다(불원), (3)아무도 권하지 않았다(비동원)라는 3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불능’ 요인은 시간(time), 돈(money), 의사소통 및 조직 능력과 관련된 시민적 기술(civic skills) 등 투표에 필요한 자원(resources)의 부족과 관련되고, ‘불원’ 요인은 선거에 대한 관심, 투표 효능감 등의 심리적 참여(engagement)의 결여를 의미하며, ‘비동원’ 요인은 정치적 동원의 네트워크(recruitment networks)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되어 있다(Brady, Verba, and Scholzman 1995).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이 3가지 요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선거와 관련된 법 및 제도, 선거유형, 선거에서의 쟁점,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전략 및 상호 간의 차별성 등 정치의 공급측면(supply side)을 암묵적으로나마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의 남부와 같이 흑인들을 투표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투표하기 위해서는 문맹검증을 하거나 인두세(poll tax)를 내어야 하는 경우와 현재의 미국은 매우 다르다. 정치자금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정부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민적 기술이

---

7) 왜 투표했느냐를 물을 경우 본문에 언급되는 분류를 뒤집은 ‘가능’, ‘원함’, ‘동원’ 외에도 습관에 의한 투표라는 항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왜 기권했느냐를 물을 경우 습관적으로 투표하던 사람의 경우 대체로 ‘불원’ 혹은 간혹 ‘불능’ 을 들 것이라는 점에서 두 질문 사이의 대체성은 완벽하지는 않다.

필요하지만 현재의 미국에서는 가장 쉬운 참여라고 할 수 있는 투표의 경우 불  
 능요인의 영향력은, 물론 직업에 따라서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할 수는 있  
 겠지만,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고, 투표하는 데 돈이 들  
 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변  
 수 중 직업을 제외하고는 불능요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능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고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뛰어나므로, 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며, 따라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도 높아 투표할  
 확률도 높아진다(김옥 1998)는 SES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역시 사회경제  
 적 지위와 불능요인과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sup>8)</sup> 하지만 SES 모델은 정치의 공  
 급측면을 고려하지 않고(혹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를 상수로 취급한 상태  
 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선거관심도 등을 통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당  
 혹은 후보자 간의 차이가 전혀 없을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  
 다 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누가 정권을 잡든 고소득자에게 유리  
 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되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선거에 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투표할 확률이 낮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보통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일정한  
 수준의 관심을 유발할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이러한 관심거리에 심리적·주관적 관심을 더 가질  
 가능성이 커기에 SES 모델이 잘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선거가 정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관심을

---

8)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거관심 등의 불능요  
 인을 통제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며, 그 대신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능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브래디 등  
 (Brady, Verba, and Schlozman 1995)은 실제 이러한 현상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이 글의 경험적 분석 역시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가질 만한 거리를 제공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SES 모델의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높은 관심을 보일 만한 선거에서는 SES 모델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가 관심을 받는 정도가 변화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주관적 관심의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필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관심의 변화 정도, 즉 민감성(sensitivity)이 달라지며, 이 민감성은, 어떤 측면에서의 공급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한다.<sup>9)</sup> 그렇다면 다른 총선과는 달리 ‘대선 같았던 17대 총선(송기도 2004)’에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8대 총선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주관적·심리적 관심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18대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거관심도(주관적·심리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될 수 없거나 혹은 오히려 SES 모델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17대 총선에서는 SES 모델의 예측과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비)동원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 역시 정치의 공급측면, 즉 어떤 식의 동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원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동원전략, 방법, 동원노력의 수준 등 정치의 공급측면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인을 동원노력에 노출시키고 동원에 반응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를 통한 투표권유는 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지만 관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동원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 노동자의 경우 과거 공장주를 통한 관권의 행사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민주화 이후 이들 공장 노동자들이 동원에 노출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동원투표를 ‘아무런 정치적 의식 없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 마을, 친척, 혹은

9)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습관적 투표에 좌우될 확률이 낮아지며, 이해관계의 계산에 능숙하다는 등 굳이 여러 이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맡기고 생략하고자 한다.

정부 관료의 권유와 압력에 순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Kim 1980, 120; 김욱 1998에서 재인용),<sup>10)</sup> 이 동원투표 때문에 SES 모델이 우리의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김욱 1998)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며,<sup>11)</sup> 관권, 조직, 금품에 의한 동원이 빈번했던 민주화 이전의 한국선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민주화 이후의 선거, 특히 이 글의 분석대상인 17대 총선이나 18대 총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지, 정당후원회 폐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유급사무원의 수 축소,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에 의한 연설회 폐지 등(정준표 2008), 17대 총선 이전의 일련의 '개혁'에 의해 조직 및 금품에 의한 유권자 동원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요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의 동원이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불능요인이 가장 쉬운 정치참여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비)동원요인을 제대로 측정하여 모델에 포함하기 어렵다면,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 혹은 기권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능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 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모델들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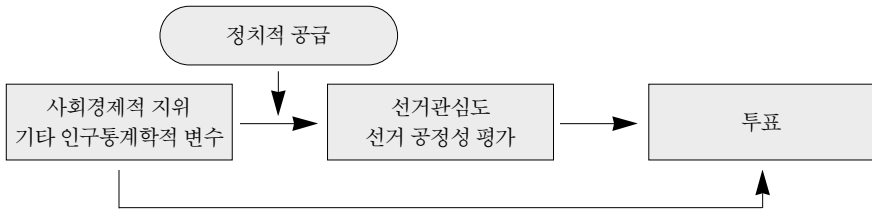
10) 이러한 정의에 따른 동원투표는 인적 접촉, 우편물 혹은 전화에 의한 투표 권유 등(Gerber and Green 2000) 정치권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동원에 따른 투표와는 달리 매수, 관권 등의 불법적 혹은 최소한 심리적으로나마 강압적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동원투표 개념이 계속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설문조사를 이용한 경험적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동원투표를 모델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민주화 이후 간혹 설문항에 포함되는 주위에서의 투표권유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정치권의 정상적 동원노력에의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동원투표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1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욱(1998)은 비자발적인 동원참여집단을 구분할 방법이 없으므로 동원 참여집단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중졸 이하의 유권자, 선거관심이 전혀 없다는 유권자 등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나, 제외의 기준이 이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고 더구나 제외된 집단이 투표율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 검증은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선거의 유형에 따라 거주지 규모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동원투표에 의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김욱 2002),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 지방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난(김욱 2002) '촌고도저' 현상은 동원보다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며, 이는 선거자료를 사용해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1〉 경험적 비교 검증을 위한 모델들



〈모델 1〉 직접경로 모델(17대 총선, 18대 총선 비교)



〈모델 2〉 간접경로 모델(17대 총선, 18대 총선 비교)

가 주로 불원요인인 선거관심도를 통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모델 2〉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거관심도와의 관계 및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정치적 공급이 관심을 끌 만한 수준이라면, 〈모델 2〉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거관심도와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거관심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sup>12)</sup> 그리고 〈모델 1〉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거관심도를 통제한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약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 공급이라는 변수의 영향은 〈모델 1〉과 특히 〈모델 2〉를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sup>13)</sup> 탄핵이슈

12) 선거관심도가 높고, 선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3) 다수의 선거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서 오는 방법론적 문제를 피하면서 체계 수준 요인(이 글에서의 정치적 공급)의 분석을 위한 우회적 방법이 각각의 선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김욱 2002).

및 이념을 둘러싼 대립이 심하였던 17대 총선은 18대 총선에 비해 관심을 끌 만한 선거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면 18대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모델 1의 경우)나 선거관심도(모델 2의 경우)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될 수 없거나, 혹은 SES 모델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17대 총선에서는 SES 모델의 예측과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모델 1〉과 〈모델 2〉에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세대, 지역규모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나이(세대)가 많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또 나이가 젊을수록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모델 2〉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투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불능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고 선거관심도와 선거공정성평가가 불능요인의 대부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주로 동원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불능요인을 통제할 〈모델 2〉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미치는 효과를 〈모델 1〉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동원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게 된다.<sup>14)</sup>

##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오차(sampling error)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표본오차이다. 특히 투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과보고(overreporting)가 흔하다

14) 김욱(2002)은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도출하면서 동시에 개인 수준의 미시적 요인과 집합 수준의 거시적 요인을 고려하는 투표참여에 관한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김욱은 일반이론의 예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투표참여 모델(Riker and Ordeshook 1968)을 들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불능, 불원, 동원 요인에 기초한 일반이론(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틀보다는 인과사슬(causal chain)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개념적 틀이 한국 선거연구에 더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는 점에서 더욱 비표본오차가 문제가 된다. 약 40% 정도의 실제 기권자가 투표를 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미국의 경우, 과보고가 투표행태 분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Bernstein, Chadha, and Montjoy 2001). 만일 투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유권자가 실제 투표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고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투표여부)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또는 관계가 있는데도 없다거나 혹은 정반대의 관계를 도출할 위험이 있다.<sup>15)</sup> 우리의 경우에도 자료에서의 변수값에 따른 투표율이 실제 투표율과 달라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편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을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공통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한 어수영(2006)은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낮으나 20대 후반은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sup>16)</sup> 같은 20대인데 전반과 후반의 투표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20대 전반이 20대 후반에 비해 선거효율성과 정치부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sup>17)</sup> 하지만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실제’ 20대 전반의 투표율(46.0%)은 20대 후반의 투표율(43.3%)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노인의 투표율에 대한 어수영(2006)의 논의 역시 ‘실제 투표율’과는 상반되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sup>18)</sup> 이준환(2006)은 17대 총선에 관한 미디어리서치의 출구조사 등 여러 집합자료를 사용하여 16대 총선에 비해 2004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증가한 것은 2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 인터넷 효과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rnstein, Chadha, and Montjoy(2001) 참고.

16) 17대 총선의 경우 20대 전반은 59.1%, 20대 후반은 68.5%, 30대는 77.0%의 투표율을 보였고, 16대 대선은 20대 전반은 48.1%, 20대 후반은 80.6%, 30대는 86.2%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이 주장 자체는 아래 <표 8>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대통령선거의 경우 전수조사(제16대 대선 이후)를 실시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약 10%를 상회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투표율’이란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표 1>의 투표율은 사실은 표본조사의 투표율이다. 하지만 <표 1>의 전체 투표율을 보면 18대 총선의 경우 실제 46.1%와 0.2%, 그리고 17대 총선의 경우 실제 60.6%와 0.5%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투표율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 실제 투표율과 사용된 자료의 투표율

성별	연령별	18대 총선	17대 총선	18대 총선 조사		17대 총선 조사	
남자	19세	38.6%					
	20대 전반	40.9%	52.6%	30.4%	69 <sup>a</sup>	62.7%	110
	20대 후반	23.4%	41.1%	28.3%	92	75.4%	61
	30대 전반	29.6%	51.5%	31.0%	71	72.5%	109
	30대 후반	38.9%	60.0%	47.2%	106	86.5%	74
	40대	49.6%	67.5%	52.6%	171	87.6%	177
	50대	63.1%	77.2%	66.5%	161	89.8%	128
	60대 이상	83.3%	80.7%	83.8%	74	93.2%	74
	전체	48.4%	63.0%	50.8%	744	81.4%	733
여자	19세	27.3%					
	20대 전반	24.1%	39.0%	30.8%	65 <sup>a</sup>	55.4%	121
	20대 후반	25.0%	45.6%	22.6%	84	62.0%	50
	30대 전반	32.5%	54.9%	30.2%	53	66.7%	99
	30대 후반	40.0%	59.7%	53.1%	113	79.3%	87
	40대	46.1%	64.4%	49.7%	165	86.0%	171
	50대	57.5%	72.3%	64.4%	222	83.7%	172
	60대 이상	59.1%	65.0%	68.5%	54	94.0%	67
	전체	44.3%	59.2%	49.9%	756	76.5%	767
전체	19세	33.2%					
	20대 전반	32.9%	46.0%	30.6%	134 <sup>a</sup>	58.9%	231
	20대 후반	24.2%	43.3%	25.6%	176	69.4%	111
	30대 전반	31.0%	53.2%	30.6%	124	69.7%	208
	30대 후반	39.4%	59.3%	50.2%	219	82.6%	161
	40대	47.9%	66.0%	51.2%	336	86.8%	348
	50대	60.3%	74.8%	65.3%	383	86.3%	300
	60대 이상	65.5%	71.5%	77.3%	128	93.6%	141
	전체	46.3%	61.1%	50.3%	1500	78.9%	1,500

a: 19세 유권자 포함한 표본의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의

등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표 1〉은 실제로는 젊은 유권자의 투표 증가가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9)</sup>

이러한 실제와 어긋나는 자료에서 오는 오류를 나름대로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3차)” 자료를, 18대 총선의 경우 (주)월드리서치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3차)”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이용 가능한 자료에 비해 <표 1>에서 보듯이 과보고의 정도도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두 자료의 문항에 비교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공통점이 있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한 다른 자료가 투표여부보다는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많은 문항을 묻고 있는데 비해 이 두 자료는 투표여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적은 문항을 묻고 있어 비표본오차의 크기도 작을 것으로 추론되는 데다, <그림 1>의 모델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 III. 사회경제적 지위, 선거관심과 투표: 경험적 분석

#### 1. 정치적 공급: 선거관심도와 선거공정성 평가에서의 차이

18대 총선은 대선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치러져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선거구도였고, 대선과정에서 시작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서 역대 어느

19) <표 1>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16대 총선의 실제 투표율과 비교하면, 17대 총선에서 50대, 60대의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20대 후반 9.1%(상대증가율 26.6%), 30대 초반 8.1%(상대증가율 18.0%), 20대 초반 6.1%(상대증가율 15.3%)의 순으로 투표율이 증가하였다.

20)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17대 총선 자료의 경우 투표율은 81.8%, 18대 총선 자료의 경우 64.4%로 나타났다. 물론 이 글에서 사용되는 자료 역시 지역규모와 투표율과의 관계 등 실제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총선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가 낮았던 선거였다(윤종빈 2008). 이에 비해 탄핵이슈를 둘러싼 대립이 기득권 대 반기득권이라는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겹쳐 첨예하게 나타난 18대 총선은 유권자의 관심이 엄청 높은 선거였다(박철희 2005). 다음의 <표 2>에서도 이 같은 관심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17대 총선에서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0.3%인데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단지 48.7%의 응답자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8대 총선은 또한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소지 여부, 선거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17대 총선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3>에서 ‘지식’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깨끗한 선거’는 과거 선거에 비해 해당 선거가 깨끗한 정도에 대한 평가, ‘선거법 준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정도에 대한 평가, ‘선관위 공정’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언론 공정’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지식의 경우 “알고 있다”의 비율을 그리고 4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상위 두 응답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식’에서는 18대 81.5% 대 17대 90.2%, ‘깨끗한 선거’에서는 18대 42.7% 대 17대 85.1%, ‘선거법 준수’에서는 18대 65.3% 대 17대 77.6%, ‘선관위 공정’에서는 18대 67.3% 대 17대 76.1%를 보여 17대 총선이 지식이나 선거 공정성의 측면에서 18대 총선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표 2> 선거 관심도의 차이

선거 관심	18대 총선			17대 총선		
	빈도	퍼센트	투표율	빈도	퍼센트	투표율
매우 많았다	187	12.5	89.8%	520	34.7	93.5%
조금 있었다	544	36.3	72.6%	683	45.6	80.5%
있음	731	48.7	77.0%	1,203	80.3	86.1%
별로 없었다	633	42.2	28.4%	237	15.8	56.5%
전혀 없었다	136	9.1	8.8%	59	3.9	22.0%
없음	769	51.3	25.0%	296	19.7	49.7%
합계	1,500	100.0	50.3%	1,499 <sup>a</sup>	100.0	78.9%

a: 무응답 1명 제외



만' 언론 공정'에서는 18대 65.3% 대 17대 59.3%로 18대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17대 총선에서 탄핵보도를 둘러싼 언론 특히 텔레비전 보도의 편파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이 17대와 18대 총선에서의 정치적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유권자의 관심도 및 선거 공정성 평가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 지식 및 선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표 3>의 카이자승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선거법 준수'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선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이지만, "비슷하다" 혹은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고려해도 '깨끗한 선거', '선관위 공정', '언론공정'은 '선거법 준수'와는 달리 투표와 선형관계(linear relation)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언론 공정'의 경우, 두 선거 모두에서 "매우 공정했다"나 "전혀 공정치 못했다"는 극단적 응답을 택한 유권자의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설명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의 경우 "비슷하다"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18대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투표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강한 의견을 가질수록 투표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혼합하여 동원해야 설명이 가능한 응답패턴을 보이는 데 비해, 17대의 경우는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투표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가능한 응답패턴을 보인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정치적 공급의 측면과 관련된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17대 총선이 18대 총선보다 실제로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하자.<sup>21)</sup> 그렇다면 17대 총선의 경우 "매우 혼탁했다"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유권자이거나 자신의 기권행위를 합리화하려

21) 고선규(2008)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건수는 17대 총선이 6,126건이고 18대 총선이 1,905건으로, 18대는 17대에 비해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위반 건수는 단속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위반건수가 많다고 하여 덜 깨끗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필자는 탄핵이슈가 결정적이었던 17대 총선이 18대 총선에 비해 훨씬 깨끗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표 3〉 선거관심도, 선거 공정성 평가와 투표율

	18대 총선			17대 총선		
	투표	기권	사례수	투표	기권	사례수
관심	$\chi^2 = 439,892$ , 유의확률: 0,000			$\chi^2 = 253,265$ , 유의확률: 0,000		
매우 많았다	89,8%	10,2%	187	93,5%	6,5%	520
조금 있었다	72,6%	27,4%	544	80,5%	19,5%	683
별로 없었다	28,4%	71,6%	633	56,5%	43,5%	237
전혀 없었다	8,8%	91,2%	136	22,0%	78,0%	59
관심1	$\chi^2 = 406,142$ , 유의확률: 0,000			$\chi^2 = 189,768$ , 유의확률: 0,000		
있음	77,0%	23,0%	731	86,1%	13,9%	1,203
없음	25,0%	75,0%	769	49,7%	50,3%	296
지식	$\chi^2 = 19,149$ , 유의확률: 0,000			$\chi^2 = 16,428$ , 유의확률: 0,000		
알고 있다	53,0%	47,0%	1,222	80,3%	19,7%	1,353
모른다	38,5%	61,5%	278	66,0%	34,0%	147
깨끗한 선거	$\chi^2 = 105,817$ , 유의확률: 0,000			$\chi^2 = 110,085$ , 유의확률: 0,000		
매우 깨끗했다	85,0%	15,0%	40	91,8%	8,2%	255
다소 깨끗했다	63,2%	36,8%	600	80,0%	20,0%	1,022
깨끗하지 못한 편	47,9%	52,1%	146	77,5%	22,5%	89
매우 혼탁했다	60,0%	40,0%	20	30,0%	70,0%	10
비슷했다	37,5%	62,5%	694	48,4%	51,6%	124
선거법 준수	$\chi^2 = 73,158$ , 유의확률: 0,000			$\chi^2 = 67,302$ , 유의확률: 0,000		
매우 잘 지켰다	71,4%	28,6%	14	94,8%	5,2%	97
대체로 잘 지켰다	58,1%	41,9%	964	81,8%	18,2%	1,067
별로 지키지 않았다	36,6%	63,4%	413	71,1%	28,9%	187
전혀 지키지 않았다	34,8%	65,2%	20	58,3%	41,7%	12
모르겠다 <sup>a</sup>	50,3%	49,7%	86	57,7%	42,3%	137
선관위 공정	$\chi^2 = 21,320$ , 유의확률: 0,000			$\chi^2 = 45,566$ , 유의확률: 0,000		
매우 공정	55,3%	44,7%	38	85,9%	14,1%	184
어느 정도 공정	54,3%	45,7%	971	82,3%	17,7%	958
별로 공정하지 않다	40,6%	59,4%	318	67,2%	32,8%	125
전혀 공정하지 않다	56,3%	43,8%	16	72,2%	27,8%	18
모르겠다 <sup>a</sup>	43,9%	56,1%	157	65,6%	34,4%	215
언론 공정	$\chi^2 = 32,252$ , 유의확률: 0,000			$\chi^2 = 28,332$ , 유의확률: 0,000		
매우 공정했다	57,1%	42,9%	21	85,9%	14,1%	85
대체로 공정했다	55,3%	44,7%	957	80,5%	19,5%	805
별로 공정치 못했다	40,6%	59,4%	414	79,1%	20,9%	416
전혀 공정치 못했다	58,1%	41,9%	31	81,2%	18,8%	85
모르겠다 <sup>a</sup>	36,4%	63,6%	77	59,6%	40,4%	109

a: 17대 총선의 경우 무응답 포함

는 유권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우 혼탁했다”는 응답자들의 투표율이 낮다. 이에 비해 18대 총선의 경우는 “매우 혼탁했다”는 응답자 중에는 선거에 일정한 관심을 가진 진지한 유권자가 17대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로 인해 투표율이 높다.<sup>22)</sup>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면, 이는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설문이라도 그에 대한 응답은 선거 상황(정치적 공급)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양변인 분석

아래 <표 4>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투표와의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투표와의 관계

18대 총선	투표	기권	사례수	17대 총선	투표	기권	사례수
	50.3%	49.7%	1,500		78.9%	21.1%	1,500
성별	$\chi^2 = 0.132$ , 유의확률: 0.716			$\chi^2 = 5.443$ , 유의확률: 0.020			
남자	50.8%	49.2%	744	남자	81.4%	18.6%	733
여자	49.9%	50.1%	756	여자	76.5%	23.5%	767
세대	$\chi^2 = 154.941$ , 유의확률: 0.000			$\chi^2 = 114.998$ , 유의확률: 0.000			
20대 전반	30.6%	69.4%	134	20대 전반	58.9%	41.1%	231
20대 후반	25.6%	74.4%	176	20대 후반	69.4%	30.6%	111
30대 전반	30.6%	69.4%	124	30대 전반	69.7%	30.3%	208
30대 후반	50.2%	49.8%	219	30대 후반	82.6%	17.4%	161
40대	51.2%	48.8%	336	40대	86.8%	13.2%	348
50대	65.3%	34.7%	383	50대	86.3%	13.7%	300
60대 이상	77.3%	22.7%	128	60대 이상	93.6%	6.4%	141
교육	$\chi^2 = 32.105$ , 유의확률: 0.000			$\chi^2 = 7.925$ , 유의확률: 0.019			
중졸 이하	61.1%	38.9%	167	중졸 이하	83.7%	16.3%	221
고졸	55.0%	45.0%	735	고졸	80.1%	19.9%	577
대재 이상	50.3%	49.7%	598	대재 이상	75.5%	24.5%	657

22) 자료에 따르면, 17대 총선의 경우 “매우 혼탁했다”는 10명 중 2명이 관심이 “조금 있었다,” 3명이 “별로 없었다,” 5명이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한 데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20명 중 2명이 “매우 많았다,” 8명이 관심이 “조금 있었다,” 5명이 “별로 없었다,” 5명이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18대 총선	투표	기권	사례수	17대 총선	투표	기권	사례수
	50.3%	49.7%	1,500		78.9%	21.1%	1,500
소득	$\chi^2 = 6.347$ , 유의확률: 0.096			$\chi^2 = 6.763$ , 유의확률: 0.034			
199만 원 미만	57.6%	42.4%	224	150만 원 미만	74.6%	25.4%	335
200~299만 원	47.5%	52.5%	459	150~300만 원	79.8%	20.2%	673
300~399만 원	49.5%	50.5%	489	300만 원 이상	82.7%	17.3%	318
400만 원 이상	50.6%	49.4%	328				
직업	$\chi^2 = 55.974$ , 유의확률: 0.000			$\chi^2 = 23.314$ , 유의확률: 0.006			
전문/자유직	55.0%	45.0%	40	전문직	77.5%	22.5%	80
경영/관리직	70.0%	30.0%	20	공무원	85.7%	14.3%	56
사무/기술직	44.5%	55.5%	319	화이트칼라	75.8%	24.2%	182
판매/서비스직	42.9%	57.1%	231	판매/서비스직	75.0%	25.0%	112
일용/작업직	51.1%	48.9%	45	블루칼라	76.9%	23.1%	91
생산/운수직	59.1%	40.9%	44				
(전업) 주부	54.1%	45.9%	351	가정주부	83.7%	16.3%	264
대학(원)생	28.9%	71.1%	114	학생	67.6%	32.4%	176
자영업	62.2%	37.8%	254	자영업자	81.3%	18.7%	380
무직	66.7%	33.3%	42	무직	82.2%	17.8%	107
농림축수산업	50.0%	50.0%	40	농림어업	82.9%	17.1%	35
지역규모	$\chi^2 = 5.909$ , 유의확률: 0.052			$\chi^2 = 0.360$ , 유의확률: 0.542			
광역시	47.7%	52.3%	679	광역시	79.6%	20.4%	725
중소도시	53.9%	46.1%	661	기타	78.3%	21.7%	775
군지역	46.9%	53.1%	160				
지역주의	$\chi^2 = 1.044$ , 유의확률: 0.791			$\chi^2 = 7.943$ , 유의확률: 0.047			
영남	49.5%	50.5%	384	영남	76.9%	23.1%	412
호남	52.4%	47.6%	206	호남	86.8%	13.2%	167
충청	53.1%	46.9%	147	충청	76.2%	23.8%	151
기타	49.7%	50.3%	763	기타	78.9%	21.1%	770

양변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18대 총선의 경우 세대, 교육, 직업이고,<sup>23)</sup> 17대 총선의 경우 성별, 세대, 교육, 소득, 직업, 지역주의로 나타난다. 이 중 두 선거에 공통적인 것은 세

23) 18대 총선에서 지역규모는 유의확률 0.052로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광역시<중소도시<읍·면'으로 자료와는 전혀 방향이 달랐다(중앙선관위 2008, 19). 한편, 17대 총선 투표율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61.0%, 기타 지역은 60.3%로(중앙선관위 2004, 8), 비록 자료에 상당한 과보고가 있지만 자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표 5〉 세대를 통제한 교육의 효과

18대 총선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전체 빈도
20대 전반	투표(%)		18.2	33.0	41
	기권(%)		81.8	67.0	93
	전체 빈도		22	112	134
		$\chi^2 = 1.911$		유의확률: 0.167	
20대 후반	투표(%)		29.4	24.0	45
	기권(%)		70.6	76.0	131
	전체 빈도		51	125	176
		$\chi^2 = 0.557$		유의확률: 0.455	
30대 전반	투표(%)		32.7	29.0	38
	기권(%)		67.3	71.0	86
	전체 빈도		55	69	124
		$\chi^2 = 0.202$		유의확률: 0.653	
30대 후반	투표(%)	100 <sup>a</sup>	49.6	50.5	110
	기권(%)	0 <sup>a</sup>	50.4	49.5	109
	전체 빈도	1	115	103	219
		$\chi^2 = 1.014$		유의확률: 0.602	
40대	투표(%)	12.5 <sup>a</sup>	51.3	53.4	172
	기권(%)	87.5 <sup>a</sup>	48.7	46.6	164
	전체 빈도	8	195	133	336
		$\chi^2 = 5.050$		유의확률: 0.080	
50대	투표(%)	54.1	68.7	67.3	250
	기권(%)	45.9	31.3	32.7	133
	전체 빈도	85	246	52	383
		$\chi^2 = 6.035$		유의확률: 0.049	
60대 이상	투표(%)	74.0	80.4	100 <sup>a</sup>	99
	기권(%)	26.0	19.6	0 <sup>a</sup>	29
	전체 빈도	73	51	4	128
		$\chi^2 = 1.916$		유의확률: 0.384	
17대 총선 20대 전반	투표(%)		45.3	62.7	135
	기권(%)		54.7	37.3	95
	전체 빈도		53 <sup>b</sup>	177	230
		$\chi^2 = 5.110$		유의확률: 0.024	

a: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칸, b: 투표한 중졸 이하 1인 포함

대, 교육, 직업이고, 17대 총선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성별, 소득과 지역주의이다. 17대 총선에서만 성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2절의 가설과 부

합하는 것이다. 소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노무현정부의 기득권층을 겨냥한 여러 언급과 정책에 위기를 느낀 고소득 계층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변수의 경우 호남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결정적 이슈가 된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두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 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연구의 공통된 발견이지만, 17대 총선에서 세대 간의 투표율 격차가 18대 총선보다 작은 것은 젊은 세대가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가설과 부합한다. 직업의 경우 이남영(1993)의 분석과는 달리 SES 모델의 예측과 부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판매서비스직, 일용직(17대는 블루칼라), 사무기술직(17대는 화이트칼라) 등이 경영/관리직, 공무원 등의 직업적 위세가 높은 집단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다. 학생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뒤의 다변인 분석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오히려 투표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주부 등은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무직은 18대의 경우 42명 중 23명, 17대의 경우 107명 중 43명이 투표율이 높은 60대라는 점 등이 이들 집단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라고 할 것이다.

교육의 경우 SES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제2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세대를 통제하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은 <표 5>가 보여준다. <표 5>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0대 전반의 경우만 포함하였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18대 총선과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30대 후반부터는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투표율이 높다.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에서 대재 이상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취업 준비 및 직장생활의 시작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표 5>에서는 17대의 20대 전반, 18대의 50대에서만 교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50대의 경우 고졸과 대재 이상의 투표율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방향은 SES 모델의 예측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경제적 지위, 선거 관심도와 투표: 다변인 분석

여기에서는 제2절에서 언급한 가설을 다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선거별로 3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제2절의 직접경로 모델로 다음의 <표 6>과 <표 7>에서는 ‘투표’ 모델에 해당한다. 둘째, 제2절의 간접경로 모델의 하나로서, 인구통계학적 여러 변수들이 선거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선거관심도가 다시 투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복모델(recursive model)로 <표 6>과 <표 7>의 ‘선거관심도’, ‘큰 선거관심도’, ‘투표(관심)’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표 6>과 <표 7>에서 ‘투표(관심)’ 모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선거관심도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고,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선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역시 제2절의 간접경로 모델에 해당하는 마지막 3번째 모델은 위 2번째 모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모델이다. <표 6>과 <표 7>의 “투표(공정성)” 모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선거관심도 및 선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표 8>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제3절 1에서 언급한 ‘지식’ 및 여러 측면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6>, <표 7>, <표 8>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가변수(dummy variable)로서, 성별의 경우 여자, 세대의 경우 60대 이상, 교육은 대졸 이상, 소득은 최고소득 집단, 지역규모는 광역시, 지역주의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포함하는 기타지역, 직업은 주부, 선거관심은 전혀 없음, 선거공정성에 대한 여러 평가는 가장 호의적 평가가 기본집단(reference category)이다. 독립변수들을 모두 가변수로 취급한 것은 제3절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와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 중 직업의 경우, 전문/관리는 18대 총선의 경우 원자료의 전문/자유직과 경영/관리직을 합한 집단을 그리고 17대 총선의 경우 원자료의 전문직과 공무원을 합한 집단을 의미하며, 화이트칼라는 18대 총선의 경우 원자료의 사무/기술직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선거관심도’ 모델에서는 <표 2>의 “있음”과 “없음”

〈표 6〉 18대 총선의 다변인 분석

독립변수(기본집단)	선거관심도		큰 선거관심도		투표		투표(관심)		투표(공정성)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성별(여자)	1.569	<b>0.001</b>	1.992	<b>0.002</b>	1.047	0.741	0.745	0.069	0.728	0.053
세대(60대이상)		<b>0.000</b>		0.000		<b>0.000</b>		<b>0.000</b>		<b>0.000</b>
20대 전반	0.191	0.000	0.085	0.000	0.090	0.000	0.152	0.000	0.186	0.000
20대 후반	0.143	0.000	0.151	0.000	0.073	0.000	0.129	0.000	0.144	0.000
30대 전반	0.165	0.000	0.076	0.000	0.092	0.000	0.177	0.000	0.190	0.000
30대 후반	0.267	0.000	0.231	0.000	0.217	0.000	0.359	0.003	0.383	0.007
40대	0.267	0.000	0.312	0.000	0.219	0.000	0.346	0.001	0.363	0.003
50대	0.506	0.007	0.404	0.002	0.462	0.004	0.623	0.123	0.638	0.154
교육(대재이상)		0.593		0.241		<b>0.028</b>		<b>0.028</b>		<b>0.026</b>
중졸 이하	0.821	0.460	0.526	0.096	0.608	0.070	0.613	0.120	0.671	0.216
고졸	1.032	0.827	0.769	0.240	1.115	0.456	1.200	0.285	1.280	0.155
소득(400만 원 이상)		0.625		0.134		0.557		0.627		0.618
0~199만 원(하)	1.013	0.955	1.165	0.617	0.962	0.863	1.012	0.964	1.049	0.858
200~299만 원(중하)	0.855	0.324	0.772	0.283	0.836	0.274	0.896	0.564	0.900	0.586
300~399만 원(중상)	0.868	0.346	0.675	0.086	1.013	0.932	1.117	0.538	1.123	0.523
지역규모(광역시)		0.625		0.182		<b>0.009</b>		<b>0.005</b>		<b>0.004</b>
중소도시	0.976	0.837	1.023	0.902	1.343	0.015	1.492	0.005	1.464	0.008
군지역	0.809	0.337	1.683	0.081	0.810	0.352	0.841	0.525	0.738	0.275
지역주의(기타)		0.100		0.069		0.589		0.115		0.102
영남	1.191	0.186	0.886	0.557	0.998	0.985	0.881	0.430	0.848	0.316
호남	0.779	0.168	0.757	0.338	1.193	0.334	1.520	<b>0.047</b>	1.518	0.058
충청	1.224	0.303	1.662	0.054	1.246	0.276	1.045	0.852	1.014	0.955
직업(주부)		0.178		<b>0.041</b>		0.127		0.083		0.082
전문/관리	1.089	0.790	2.413	0.035	1.856	0.062	2.107	0.064	1.912	0.107
화이트칼라	0.750	0.141	0.697	0.288	1.077	0.711	1.475	0.094	1.544	0.065
판매/서비스	0.609	<b>0.011</b>	0.919	0.785	0.760	0.162	0.963	0.868	0.939	0.786
블루칼라	0.592	0.056	0.544	0.165	0.864	0.598	1.295	0.428	1.363	0.353
학생	1.029	0.935	1.850	0.289	1.059	0.877	1.031	0.944	0.993	0.987
무직/기타	0.584	0.172	0.645	0.399	1.674	0.220	2.727	<b>0.036</b>	2.726	<b>0.038</b>
농림어업	0.591	0.194	0.493	0.200	0.775	0.535	1.055	0.911	0.998	0.997
자영업	0.776	0.198	0.818	0.520	1.209	0.346	1.648	<b>0.033</b>	1.605	<b>0.048</b>
선거관심(전혀 없음)								<b>0.000</b>		<b>0.000</b>
매우 많음							86.433	0.000	81.319	0.000
조금 있음							25.567	0.000	24.529	0.000
별로 없음							3.756	0.000	3.989	0.000



독립변수(기본집단)	선거관심도		큰 선거관심도		투표		투표(관심)		투표(공정성)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깨끗한선거(매우 깨끗)										<b>0.006</b>
다소 깨끗									0.355	0.075
깨끗 못한 편									0.503	0.260
매우 혼탁									1.187	0.841
비슷함									0.282	0.029
선거법준수(매우잘준수)										<b>0.003</b>
대체로 준수									1.106	0.904
별로 준수않음									0.588	0.527
전혀 준수않음									0.825	0.846
모름									0.615	0.581
카이자승	117.436		96.934		196.144		602.983		636.125	
사례수/자유도	1499/25		1499/25		1499/25		1499/28		1499/36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Cox & Snell R <sup>2</sup>			0.063		0.123		0.331		0.346	
Nagelkerke R <sup>2</sup>			0.118		0.164		0.442		0.461	
분류정확 %					64.0		76.4		77.1	

의 두 집단 중 “없음”, ‘큰 선거관심도’ 모델에서는 <표 2>의 “매우 많았다”와 기타 집단 중 기타 집단, 3개의 투표모델에서는 투표와 기권 중 기권, 그리고 <표 8>에서 지식의 경우 <표 3>의 “모른다,” 기타 4 종류의 선거공정성 평가에서는 상위 두 항목을 묶은 집단과 기타 집단 중 기타 집단이 기본집단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나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을 할 수도 있으나,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를 따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표 6>과 <표 7>에서  $Exp(\beta)$ 는 승산비(odds ratio)로서, 예를 들어 <표 6>의 ‘선거관심도’ 모델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남자가 선거에 관심 있을 확률이 기본집단인 여자가 관심 있을 확률의 1.569배이며, ‘투표’ 모델에서는 남자가 투표할 확률은 여자가 투표할 확률의 1.047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거관심도의 승산비가 1보다 크면(작으면) 기본집단보다 선거관심이 있을 확률

〈표 7〉 17대 총선의 다변인 분석

독립변수(기본집단)	선거관심도		큰 선거관심도		투표		투표(관심)		투표(공정성)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성별(여자)	1.204	0.275	1.729	<b>0.000</b>	1.394	<b>0.042</b>	1.346	0.103	1.298	0.163
세대(60대 이상)		<b>0.000</b>		<b>0.000</b>		<b>0.000</b>		<b>0.000</b>		<b>0.000</b>
20대 전반	0.231	0.000	0.133	0.000	0.060	0.000	0.088	0.000	0.082	0.000
20대 후반	0.474	0.066	0.184	0.000	0.117	0.000	0.137	0.000	0.138	0.000
30대 전반	0.515	0.063	0.287	0.000	0.123	0.000	0.131	0.000	0.125	0.000
30대 후반	0.643	0.245	0.251	0.000	0.234	0.002	0.270	0.011	0.279	0.016
40대	1.234	0.534	0.384	0.001	0.436	0.053	0.415	0.067	0.426	0.085
50대	0.868	0.641	0.458	0.003	0.440	0.045	0.466	0.091	0.456	0.091
교육(대재 이상)		0.066		<b>0.009</b>		0.340		0.775		0.748
중졸 이하	0.548	<b>0.035</b>	0.480	0.004	0.688	0.219	0.947	0.875	1.051	0.888
고졸	0.951	0.791	0.924	0.601	1.025	0.891	1.116	0.582	1.163	0.464
소득(300만 원 이상)		<b>0.036</b>		0.080		<b>0.020</b>		0.213		0.124
150만 원 이하	0.597	0.025	0.670	<b>0.038</b>	0.552	0.008	0.663	0.098	0.605	0.051
150~300만 원	0.906	0.620	0.757	0.063	0.843	0.365	0.894	0.589	0.858	0.473
지역규모(광역시)	0.788	0.119	0.758	<b>0.029</b>	0.970	0.841	1.073	0.670	1.129	0.477
지역주의(기타)		<b>0.009</b>		<b>0.017</b>		0.072		0.470		0.449
영남	0.638	0.009	0.704	0.020	0.844	0.321	1.049	0.800	1.167	0.435
호남	1.394	0.204	1.358	0.123	1.781	<b>0.033</b>	1.579	0.114	1.568	0.129
충청	0.747	0.230	0.968	0.882	0.921	0.737	1.030	0.915	0.997	0.991
직업(주부)		0.583		0.380		0.265		0.636		0.464
전문/관리	2.043	<b>0.043</b>	1.731	<b>0.039</b>	1.205	0.572	0.955	0.898	0.964	0.920
화이트칼라	1.475	0.200	1.173	0.540	0.894	0.705	0.808	0.513	0.830	0.575
판매/서비스	1.425	0.269	1.471	0.160	0.887	0.705	0.793	0.511	0.940	0.867
블루칼라	1.089	0.811	1.086	0.791	0.652	0.229	0.619	0.231	0.647	0.297
학생	2.111	0.052	2.095	<b>0.040</b>	1.808	0.118	1.382	0.437	1.588	0.283
무직/기타	1.314	0.440	1.534	0.164	1.310	0.497	1.093	0.833	1.409	0.443
농림어업	1.181	0.738	1.065	0.887	0.844	0.764	0.655	0.483	0.768	0.673
자영업	1.174	0.506	1.341	0.167	0.758	0.272	0.693	0.180	0.681	0.169
선거관심(전혀 없음)								<b>0.000</b>		<b>0.000</b>
매우 많음							60,408	0.000	41,459	0.000
조금 있음							18,180	0.000	12,516	0.000
별로 없음							5,143	0.000	3,940	0.001
깨끗한선거(매우 깨끗)										<b>0.022</b>
다소 깨끗									0.953	0.869
깨끗 못한 편									1,294	0.564
매우 혼탁									0,378	0.286
비슷함									0,419	0.023

독립변수(기본집단)	선거관심도		큰 선거관심도		투표		투표(관심)		투표(공정성)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Exp(B)	유의 확률
선거법준수(매우잘준수)										0.054
대체로 준수									0.472	0.147
별로 준수않음									0.430	0.133
전혀 준수않음									0.058	<b>0.003</b>
모름/무응답									0.380	0.095
선관위공정(매우공정)										<b>0.026</b>
대체로 공정									1.384	0.254
별로 공정치 않음									0.655	0.271
전혀 공정치 않음									3.049	0.134
모름/무응답									0.914	0.796
카이자승	75.975		109.068		122.398		308.082		345.574	
사례수/자유도	1307/23		1308/23		1308/23		1308/26		1307/38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Cox & Snell R <sup>2</sup>	0.056		0.080		0.089		0.210		0.232	
Nagelkerke R <sup>2</sup>	0.090		0.110		0.139		0.327		0.362	
분류정확 %	80.9		67.1		79.4		82.9		84.1	

이 높고(낮고), 투표의 승산비가 1보다 크면(작으면) 기본집단보다 투표할 확률이 높다(낮다).<sup>24)</sup>

〈표 6〉과 〈표 7〉에서 굵은체의 유의확률은 해당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굵은 기울임체의 유의확률은 5% 유의수준에서 해당 집단이 기본집단에 대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하 제2절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언급한 여러 가설들이 〈표 6〉 및 〈표 7〉의 결과들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자.

•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거관심

불원요인,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관심도가 투표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 선거 모두에서 R<sup>2</sup>(Cox & Schnell 혹은 Nagelkerke)나 분

24) 〈표 6〉과 〈표 7〉에서는 회귀계수의 추정치 및 표준오차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면상의 제약도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회귀계수의 추정치보다는 승산비가 훨씬 해석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류정확 % 기준으로 본 모델의 설명력이 선거관심도를 통제한 ‘투표(관심)’ 모델이 ‘투표’ 모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선거 공정성 평가까지 통제한 ‘투표(공정성)’ 모델은 ‘투표(관심)’ 모델에 비해 설명력의 증가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승산비나 유의확률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선형회귀분석에서는 회귀계수의 해석 및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그리고 전체 영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나,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여기서 먼저 승산비가 모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의 두 승산비가 모두 ‘투표’의 승산비보다 작으면, ‘투표(관심)’의 승산비는 ‘투표’의 승산비보다 크다; (2) ‘투표’의 승산비가 1보다 클 때,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의 두 승산비가 모두 ‘투표’의 승산비보다 크면, ‘투표(관심)’의 승산비는 ‘투표’의 승산비보다 작다; (3) ‘투표’의 승산비가 1보다 작을 때,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의 두 승산비가 모두 1보다 작다면, ‘투표(관심)’의 승산비는 ‘투표’의 승산비보다 크다. 18대 총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해보자. 18대 총선에서는 실제 선거결과와 상반되는 지역규모를 제외하면 세대와 교육만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세대 중 20대 전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승산비가 어떻게 모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표’ 모델에서 20대 전반이 투표할 확률은 기본집단인 60대가 투표할 확률의 0.090배이고, ‘선거관심도’ 모델과 ‘큰 선거관심도’ 모델에서 20대가 관심 혹은 큰 관심을 가질 확률이 각각 60대의 0.191배와 0.085배로 공히 60대보다 작으므로, 선거 관심도를 통제한 ‘투표(관심)’ 모델에서는 20대 전반의 승산비(0.152)가 ‘투표’ 모델의 승산비(0.090)보다 커진다. 마찬가지로 ‘선거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 모델에서 남자가 각각 1.569배와 1.992배로 여자보다 관심을 가질 확률이 크므로, 선거 관심도를 통제한 ‘투표(관심)’ 모델에서는 남자의 승산비(0.745)가 ‘투표’ 모델의 승산비(1.047)보다 작아진다. 이는 ‘투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투표할 확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거 관심도를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교육의 경우

고졸의 승산비가 ‘선거관심도’ 모델에서는 1.032, ‘큰 선거관심도’ 모델에서는 0.769로 ‘투표’ 모델의 승산비 1.115가 더 커질지 혹은 작아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실제 결과는 종합적으로 선거관심도에서 고졸이 기본집단인 대재이상보다 낮기에 선거관심도를 통제한 ‘투표(관심)’ 모델에서는 승산비가 1.200으로 ‘투표’ 모델의 승산비 1.115보다 크다.

정치적 공급이 관심을 끌 만한 수준이라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거관심도와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거관심도가 높아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심도를 통제한 모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의 적합성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18대 총선보다 아주 높았던 17대 총선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소득에서 보듯이 선거관심도를 통제하면 ‘투표’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이들 변수가 ‘투표(관심)’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교육 또한, 비록 5%라는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선거관심도에 가설과 부합되는 영향을 미치며 그 통계적 유의성(유의확률 0.066)도 상당히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은 그 자체로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선거관심도나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집단인 주부에 대비하여서는 전문/관리와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다.<sup>25)</sup> 이 두 집단은 18대 총선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이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18대 총선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는 선거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선거관심도를 통제하여도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18대 총선에서는 교육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투표(관심)’ 및 ‘투표(공정성)’에서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불원요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는 가설에서 도출된 “18대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거관심도(주관적·심리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될 수 없거나 혹은 오히려 SES 모델의 예측과는 다

25) 기본집단을 바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17대 총선에서는 SES 모델의 예측과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도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의 교육 및 소득이 선거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선거관심

남자가 여자보다, 세대가 높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은 전체적 방향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표 6>에서는 30대 전반이 ‘큰 선거관심도’에서 가장 낮고, <표 7>에서는 ‘선거관심도’에서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집단인 60대 이상이 높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표 6>의 젊은 세대의 승산비가 <표 7>에서는 확연히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은 <표 6>과 <표 7>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다. ‘선거 관심도’와 ‘큰 선거관심도’ 둘 모두에서 18대 총선의 승산비가 17대 총선보다 크기에 가정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1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고, 선거2에서 정치적 공급의 변화가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때, 관심 여부를 묻는 문항에 증가된 관심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선거1에서 관심이 있다고 한 남자가 선거1에서 관심이 있다고 한 여자보다 많으므로 선거2에서는 남녀간의 선거관심도 차이가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이다.

#### • 동원요인, 직업과 투표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공정성)’ 모델과 ‘투표’ 모델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비교하면 동원요인의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언급할 수 있다. 직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관심도가 기본집단인 주부에 비해 낮은 집단은 블루칼라, 무직/기타, 농림어업(등)이나 이들의 승산비는 ‘투표’ 모델에서보다 ‘투표(공정성)’ 모델에서 증가한다. 특히 무직/기타의 경우 ‘투표’ 모델에서는 주부보다 투표할 확률이 1.674배였던 것이 ‘투표(공정성)’ 모델에서는 2.726배로

〈표 8〉 지식 및 선거공정성 평가

선거	변수		지식	깨끗한 선거	선거법 준수	선관위 공정	언론 공정
18 대 선 거	성별	긍정	남	남	남	남	여
		부정	여	여	여	여	남
	세대	긍정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
		부정	20대 전반	20대 전반	20대 후반	20대 전반	20대 후반
	교육	긍정	고졸	대재 이상	대재 이상	중졸 이하	중졸 이하
		부정	대재 이상	중졸 이하	중졸 이하	대재 이상	대재 이상
	소득	긍정	상	상	상	상	증상
		부정	중하	하	하	하	하
	지역규모	긍정	군지역	군지역	군지역	광역시	군지역
		부정	광역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지역주의	긍정	충청	충청	영남	영남	영남
		부정	영남	기타	호남	호남	호남
	직업	긍정	무직/기타	판매/서비스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부정	블루칼라	블루칼라	블루칼라	블루칼라	블루칼라
17 대 선 거	성별	긍정	남	여	남	남	여
		부정	여	남	여	여	남
	세대	긍정	30대 후반	60대 이상	60대 이상	50대	20대 후반
		부정	20대 전반	20대 전반	20대 전반	20대 전반	60대
	교육	긍정	대재 이상	대재 이상	고졸	대재 이상	고졸
		부정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중졸 이하	대재
	소득	긍정	고소득	중간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중간소득
		부정	저소득	저소득	저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지역규모	긍정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부정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지역주의	긍정	호남	호남	충청	호남	호남
		부정	충청	영남	영남	영남	영남
	직업	긍정	농림어업	전문/관리	학생	블루칼라	학생
		부정	무직/기타	무직/기타	판매/서비스	판매서비스	농림어업

증가한다. 이들은 결국 동원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표 7〉의 17대 총선에서는 모든 집단이 기본집단인 주부보다 선거

관심이 많고, 승산비가 '투표' 모델에서보다 '투표(공정성)' 모델에서 미미하  
 나마 증가하는 집단은 무직/기타뿐이다. 결국 동원요인은 17대 총선보다 18대  
 총선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지만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투표' 모델에서도 제3절 2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판매/서비스, 블루칼라, 농림어업의 투표율이 낮게 나  
 타난다. 학생의 경우, 투표할 확률이 주부보다 18대의 경우 1.059배, 17대의  
 경우 1.808배로 나타나 다른 변수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  
 시켜 준다.

이제 '투표(공정성)'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자. 제3절 1의 <표 3>의  
 지식 및 언론공정은 17대와 18대 모두에서, 그리고 선관위 공정은 18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이 너무 떨어져 "투표(공정성)"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표 6>과 <  
 표 7>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 모델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성 관련  
 변수들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 8>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지식 및 4개의 선거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요약한 것이다. <표 8>에서 긍정과 부정 모두가 꺾은체인 경우는 해당 변  
 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과 부정 중 하나만  
 꺾은체인 경우는 해당 집단이 <표 6>과 <표 7>의 기준집단과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에서 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류층이 오히려 선거공정성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  
 로 나타난다. 17대 총선의 교육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호의적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현실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쉽다는 흔한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다. <표 8>에서 선거 공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변수는 지  
 역주의이다. 18대 선거에서는 영남이 긍정적, 호남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  
 향이 있는데 반해 17대 선거에서는 영남이 부정적, 호남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  
 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다. 18대 이명박 정부는 영남정권, 17대 노무현 정부는



호남정권이라는 인식을 많은 유권자가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직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18대의 블루칼라 등 가장 부정적 평가가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SES 모델은 정치의 공급측면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한국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관권, 금권에 의한 동원선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강제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결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투표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정당 및 후보자와 차별성 있는 이념 및 정책을 제시할 때만 제고될 수 있다.<sup>26)</sup> 정치의 공급 측면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SES 모델은 참여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강조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의 공급수준이 낮았던 18대 총선에는 SES 모델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SES 모델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표 6>의 ‘투표’ 모델에서 중졸 이하가 고졸이나 대재 이상보다 투표할 확률이 훨씬 낮는데 비해 고졸과 대재 이상은 투표율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직업이 투표에 미치는 영

---

26) 이와 관련하여 정준표(2008)는 한국 정당 개혁의 모델로 “프로그램 정당”을 제시한다. 이념이나 정책노선이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에 따른 정책이 실제 의도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이념이나 정책노선의 요란함에 비례하여 유권자의 실망이 커질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은 한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엄청 떨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념 및 정책노선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도 SES 모델의 예측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공급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17대 총선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의 적실성이 엄청 커져 선거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커지며, 따라서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 같이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크다면, 정치적 공급의 수준이 높을 경우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불균등하게 커지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정치적 공급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대답은 보통의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소득으로 대체하고 저소득과 고소득 두 집단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낮은 정치적 공급 수준에서는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 간에 투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소득 집단에 불리한 정책이 선거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분배적 정책이 제시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정치적 공급의 변화에 민감한 고소득 집단의 투표율은 엄청 높아지나, 저소득 집단의 투표율은 그 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 집단의 크기가 고소득 집단의 크기보다 크다면 저소득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표한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공급의 수준이 높아 거의 대부분이 이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정치의 공급 수준이 중범위에 있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을 때 SES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18대 총선이 46.1%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결국 우리 정치가 유권자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7대 총선은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이다.

**[참고문헌]**

고선규. 2008. “2008년 총선에서 선거법 및 선거제도 운용.” 한국정당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김 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197-254. 서울: 푸른길.

\_\_\_\_\_.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205-246. 서울: 푸른길.

\_\_\_\_\_.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371-405.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진하. 2004. “소득수준에 따른 계급 투표의 부활: 미국 대선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465-493.

\_\_\_\_\_. 2008. “17대 대선 투표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5-30.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18집 1호: 93-122.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53-174.

\_\_\_\_\_. 1996.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개관: 선거 후 유권자 면접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편. 『제15대 총선 분석』, 15-60. 서울: 세종연구소.

\_\_\_\_\_.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집 1호: 147-193.

박철희. 2005.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본 4·15총선.”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304-339. 서울: 푸른길.

서복경. 2008.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한국정당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송기도. 2004. “탄핵 이슈에 압도당한 선거: 전복 남원 · 순창.” 한국정당학회 편.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65-123. 서울: 푸른길.

어수영. 2006.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227-268. 서울: 오름.

어수영 · 박진영. 2001.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

- 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165-188.
- 윤종빈. 2008. “18대 은평(을) 선거구 선거분석.” 한국정당학회·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21-47. 서울: 나남.
- 이준한. 2006. “17대 총선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135-184. 서울: 오름.
- 정준표. 2008. “한국 정당 개혁의 모델: 프로그램 정당.” 『21세기정치학회보』 18집 2호: 68-91.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51-7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_\_\_\_\_.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 Bennett, Stephen Earl, and David Resnick. 1990. “The Implication of Nonvoting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No. 3: 771-802.
- Bernstein, Robert, Anita Chadha, and Robert Montjoy. 2001. “Overreporting Voting: Why It Happens and Why It Matters.” *Public Opinion Quarterly* 65, No. 1: 22-44.
-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ehman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No. 2: 271-294.
- Franklin, Mark N. 1999. “Electoral Engineering and Cross National Turnout Differences: What Role for Compulsory Vot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205-216.
- Gerber, Alan S., and Donald P. Green. 2000. “The Effects of Canvassing, Telephone Calls, and Direct Mail on Voter Turnout: A Field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No. 3: 653-663.
- Hay, Colin. 2007. *Why We Hate Politics*. Cambridge, UK: Polity Press.

- Kim, Chong Lim.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ed Voting." Kim Chong L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Santa Barbara, CA: Clio Books.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1: 1-14.
-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2nd ed. Chicago: Rand McNally.
- Nagel, Jack, H. 1987. *Particip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No. 1: 25-42.
- Verba, Sidney. 1996. "The Citizen as Respondent: Sample Surveys and American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No. 1: 1-7.

[ABSTRACT]

## Socioeconomic Status and Voting: A Comparison between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General Election

Jung, Joon-Pyo | Yeungnam University

Is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SES model) which states that the higher in socioeconomic status a person is, the more likely he or she is to vote not applicable to Korean elections? This paper claims that, if changes in the supply side of politic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SES model is applicable to the 17th and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o test this claim empirically, the paper constructs various models, runs these models with the 17th and the 18th election data, and compares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applicability of the SES model to the 18th election where the level of political supply was low is not high, but it cannot completely be denied.
- (2) The applicability of the SES model to the 17th election where the level of political supply was high is very high.
- (3)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s voting primarily through its effect on electoral interest.
- (4) The higher a person is in his or her socioeconomic status, the more sensitive is his or her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supp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oter turnout can significantly increase if parties or candidates offer voters feasible policies based on distinct and coherent programmatic or ideological agenda.

---

**Key Words** | SES model, voting, electoral interest, electoral fairness, education, income, regionalism